

| 기획재정부 | | 보도자료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| 2021. 6. 24.(목) 17:30 | 배포일시 | 2021. 6. 24.(목) 17:00 |
| 담당과장 |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 남경철(044-215-5310)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(044-215-5330) | 담당자 | 이승민 사무관 sseung513@korea.kr 이해인 사무관 haein85@korea.kr |

'21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상황 점검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집행 개선방안 논의 -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-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6월 24일(목) 15:00,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」를 주재하여,
 - '21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,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집행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<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>

- ▶ 일 시 : 2021. 6. 24.(목) 15:00
- ▶ 장 소 : 정부서울청사 ↔ 세종청사
- ▶ 참석자 :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(주재),
행안부·교육부 등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시도지사체

- 안 차관은 그동안 재정관리점검회의 매월 개최, 수시 현장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 사전 발굴·신속 해소 노력 등에 힘입어
 - 금년 상반기(6월말) 집행실적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*한 목표치를 +2.0%p(중앙재정)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
- *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(%) : ('17) 58.0 ('18) 58.0 ('19) 61.0 ('20) 62.0 ('21) 63.0
- 우리경제의 조기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- 또한 집행 내용에 있어서도 일자리사업, SOC(생활SOC 포함) 사업, 디지털·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사업 등 핵심 사업군의 집행 실적도 당초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

- 당면 현안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, 선도형 경제 전환 인프라 구축, 서민·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.

- 더불어 오늘 회의에서는 대표적 집행 부진 사업 영역인 지자체 자본보조사업('20년 이월액 11조원)에 대해 전면적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집행 부진요인을 파악하고,

-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·집행·평가 전 주기에 걸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*을 마련하여 관련 지침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고, 각 부처에서도 사업현장에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- * ① 모든 다년도 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, 집행 실적에 따른 수정, 이와 연계한 예산 반영
 ② 연도중 지자체별 집행실적·과부족을 반영한 교부금 조정
 ③ 재정사업 평가시 집행률을 실행률 기준으로 개선

※ <붙임> 안전요약 1.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
 안전요약 2.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집행 개선방안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길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안건 1

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

□ (재정별 조기집행 점검) 중앙재정·지방재정·지방교육재정 모두 6월말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됨

- ① (중앙재정) 6월 15일(속보치) 기준, 202.3조원(58.9%) 집행하여 목표의 93.4% 달성, 6월말까지 223.4조원 집행하여 목표 +2.0%p 초과달성 전망
- ② (지방재정) 분기말 예정되어 있는 집행소요 등을 감안할 때, 6월말까지 146.7조원(60.4%)을 집행하여 목표 달성 전망
- ③ (지방교육재정) 6월 15일 속보치 기준, 12.4조원(64.7%)을 집행하여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으며, 6월말까지 +4.5%p 초과달성 전망

< 재정별 집행실적 및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| 구 분 | 관리대상 규모 (A) | 상반기 목표 | | 5월말 실적 | | 6월말 전망 | | 목표 달성률 (E/B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금액 (B) | (B/A) | 금액 (C) | (C/A) | 금액 (E) | (E/A) | |
| 중 앙 재 정 | 343.7 | 216.5 | 63.0 | 183.4 | 53.4 | 223.4 | 65.0 | 103.2 |
| 지 방 재 정 | 243.9 | 146.0 | 60.0 | 115.5 | 47.4 | 146.7 | 60.4 | 100.5 |
| 지방교육재정 | 19.1 | 12.1 | 63.5 | 11.1 | 58.0 | 13.0 | 68.0 | 107.1 |

□ (분야별 조기집행 점검) 일자리·SOC·생활SOC·한국판 뉴딜 등 재정집행 핵심 분야별로도 무난히 목표 달성 전망

- ① (일자리) 5월말 기준 이미 목표(9.1조원)를 초과한 9.2조원 집행, 6월말까지 10.3조원을 집행하여 113.2% 목표 달성 전망
 - ② (SOC와 생활 SOC) 5월말 기준, 계획보다 각각 +9.2%p, +7.1%p 초과한 상태로 6월말 원만히 목표 달성 전망
- * SOC(54.2조원) : (5월 계획) 23.5조원(43.4%), (실적) 28.5조원(52.6%), +9.2%p
생활 SOC(11.0조원) : (5월 계획) 4.9조원(44.9%), (실적) 5.7조원(52.0%), +7.1%p
- ③ (한국판 뉴딜) 5월말 기준 13.3조원(59.3%) 집행, 6월말까지 15.7조원 집행하여 목표 달성 전망

< 분야별 집행실적 및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| 구 분 | 관리대상 규모 (A) | 상반기 목표 | | 5월말 실적 | | 6월말 전망 | | 목표 달성률 (E/B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금액 (B) | (B/A) | 금액 (C) | (C/A) | 금액 (E) | (E/A) | |
| 일자리 | 13.6 | 9.1 | 67.0 | 9.2 | 68.0 | 10.3 | 76.0 | 113.2 |
| SOC | 54.2 | 33.6 | 62.0 | 28.5 | 52.6 | 34.6 | 63.8 | 103.0 |
| 생활SOC | 11.0 | 7.2 | 65.5 | 7.2 | 52.0 | 7.3 | 66.4 | 101.3 |
| 한국판 뉴딜 | 22.5 | 15.7 | 70.0 | 13.3 | 59.3 | 15.7 | 70.0 | 100.0 |

안건 2

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실적행 개선방안

□ (현황) 지자체 자본보조사업(‘21년, 19.3조원)은 부처가 자금을 교부하는 시점의 ‘집행률’에 비해 지자체에서 ‘실집행률’은 낮은 66.3% 수준

- * ‘20년 자본보조사업 집행률 97.8% → 실집행률 66.3%
- * ‘20년 지방재정 전체 이불용률(10.4%) 보다 자본보조금 이불용률(33.7%) 높음

○ 지난해 지자체가 이·불용한 예산 46조원 중 국가가 지원한 자본보조사업의 이월액이 11조원(국비 6.2+ 지방비매칭 4.5)을 차지

- * 자본보조 이월액(실집행률): (‘18) 4.5조원(69.6%), (‘19) 5.7조원(68.6%), (‘20) 6.2조원(66.3%)
- * 부처가 지자체에 교부(집행)한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사업 추진 등으로 민간부문에 실집행될 때 경기 활성화 + 공공시설 국민편익 실현가능

□ (분석) 지자체 자본보조금 예산은 e나라도움시스템(17년 도입)에 따라 실적행 집계 기반 구축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하여, 만성적 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

- ① 일부 부처 사업은 연차별 공정률(계획 → 설계 → 보상 → 인허가 → 공사 등)을 반영하지 않고, 예산을 배정하는 사례*
- ② 부처가 다수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시 지자체별 실적행 여력에 따라 교부액 규모를 연중 조정하는 체계 부족
- ③ 그간 ‘집행률’ 기준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인해, 지자체에서의 실적행 여부를 파악할 유인 부족
- ④ 지자체 입장에서 보조금을 충분히 미리 받아 놓고, 이를 이월하여 다년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는 관행이 반복

□ (개선방안) 실적행 부진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·집행·성과관리 등 예산 전주기별 개선방안 마련

- ① (예산편성) 다년도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실적을 반영해 수정하고,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 도입

② (집행관리) 부처별로 연도 중에 지자체별 실행실적을 점검하고, 실행실적을 반영하여, 지자체별 보조금 과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교부금을 탄력조정하여 전체 집행률 제고

* 실행 부진 지자체에서 집행원활·자금부족 지자체로 조정

③ (성과평가) 보조사업 평가시 집행실적 기준을 '집행률'에서 '실행률'로 바꾸어 부처에서의 실행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

* 보조사업연장평가 : 실행 실적에 따른 감점(최대3점) 부여
재정사업자율평가 : 집행실적 평가기준을 실행률로 변경

④ (인센티브) 균특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차등지원 인센티브 산정시 지자체별 실행 제고 실적을 반영

* 균특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: 예산집행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차등